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 추진 지정 절차중 하나로 21일 부안에서 설명회 열어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도 마련에 나선다.

도는 지자체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이하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집적화 단지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8조(신·재생에너지 지정책임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전북도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

괄한다.

또, 도는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북도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아 해상풍력 발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FC)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다.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이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더욱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중의 하나로 전북도는 지난 16일 고창 설명회, 21일 부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홈페이지 사업공고 등을 통해 전화, 이메일 등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상반기까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방향을 계획한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서 검토 후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적화단지 지정·공고한다.

김희욱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내 곳곳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속 방역체계 확립을”

송 지사, 시장·군수
긴급 방역대책 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넘게 10~2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지난 16일 열었다.

이날 송 지사는 “확산의 고리를 끊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 추진체계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특히 “도민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공직자와 방역당국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장기화한 코로나19로 힘들겠지만, 모든 공직자가 진정성과 성실성을 다시 한번 다잡고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임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3차 유행을 넘어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양상이다”며 “전북지역도 4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집단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치 않다”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일선 현장에서의 방역 강화, 진단검사 확대, 백신접종 신속 이행, 참여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등 4가지 과제의 시행을 당부했다.

도, 미래성장 담보 대형사업 발굴 박차

지역산업 침체 등 극복 위해... 전문가 TF 첫 회의

전북도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전북의 미래성장을 담보한 대형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도는 미래 성장형 대형사업 발굴 전문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다가올 20대 대선 공약과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전북의 혁신산업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모인 킥오프 자리였다.

이날 좌수 회의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함께하며, 해양·빅데이터·ICT·드론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는 향후 먹거리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한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보강,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미래먹거리의 토대를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기술인 빅데이터·AI·ICT 등의 기술융합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주재로 혁신기관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전북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대형 사업발굴과 사업화 방향 등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조선 산업의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대형 사업을 발굴, 지역경제의 새로운 번영점을 만들어 도약시킬 산업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TF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 가능성·효과성·파급성 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 국가 사업화 및 대선공약 반영 등을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반의 외연확대와 질적 도약을 위해 신기술과 연계한 대형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인근 국가 동의없이 오염수 방류? 안될말”

전북 고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소속 16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결사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정부·여·야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근국가에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

원전동맹, 日 정부 결정에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 해양투기 선택” 강력 비판

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중수소, 탄소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염수 처리방법은 지중주입, 지하매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현실화되면 어민은 물론 수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소속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대표인 전국원전동맹은 일본의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사력을 다 할 것인 만큼, 정부와 여·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314만 국민들의 대표인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영화는 계속된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돌아온 봄의 영화 축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 스페셜 포커스 : 코로나, 뉴노멀
- 스페셜 포커스 : 인디펜던트 우먼
- 아토 스페셜 : 새로운 바람
- 제7회 100 필름 100 포스터
- 전시 일정 : 2021. 04. 29 - 05.08 / 10:00 - 18:00
- 전시 장소 : 전주 팔복예술공장
- 프로그램 이벤트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JEONJUIFF
- 전주커피퍼런스 '영화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JEONJU 22
intl. film festival

2021.4.29-5.8